

## 인권적 관점\_대체역 심사 제도의 인권적 평가(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 1. 들어가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8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고린도전서 1장 27-28절)

“양심을 입증한다는 게 제일 어려웠다. 인간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때문에 답답했다. 무형의 것을 보이는 것으로 입증하러니 어려웠다.”(어느 대체복무 신청인의 말)

필자는 2020년 6월 대체역심사위원회(아래 대체역심사위)의 29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됐고, 3년 임기의 막바지를 맞게 됐다. 그간 3천여 명의 젊은이가 대체역심사위를 거쳐갔고 그중 1/3인 1천여 명이 전국의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다. 나머지는 여전히 복무 대기 중이다. 심사를 거치는 기간도 길고<sup>1)</sup> 대체역으로 편입이 인정되더라도 복무 장소가 교도소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하는 기간도 길다(경우에 따라 2-3년이 걸린다). 자칫하면 20대라는 시절의 6년여를 대체역 복무를 위한 유예기간으로 보내야 한다. 신청인은 대개 20대 초반이지만, 일부 소수는 대체역 제도의 도입을 기다리며 입영을 늦춰왔기에 30대를 목전에 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20대 내내 일군 생업이나 진로 계획을 중단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가 예상되고 개인들의 삶의 기회에 심각한 부당한 병목(bottleneck)을 만들고 있다.

이런 신청인들의 상황 탓에, 본인들이 원해서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체복무를 택했다고는 하지만, 대체역 편입을 인정하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누군가의 삶을 너무 힘든 상황으로 밀어 넣는 것 같은 자책감, ‘과연 이 제도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곤 한다. 물론, 대체역심사위 위원들의 성향은 다양하기에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여전히 고집하며, 소위 ‘기피자’를 가려내는 데 총력을 다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공적 이성’ 내지 ‘상식’이라 할 것을 공유하는 대개의 위원들은 대체역 복무자의 앞에 놓인 고단한 삶을 염려하며 고뇌한다. 이런 제도하에서 계속 편입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회의감 앞에서 흔들린다.

한편 ‘여호와와 증인’ 신도가 신청인의 대부분이지만, 여타 종교의 신도이거나 생태주의·반성 차별주의·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등 구조화된 폭력에 저항하는 신념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여호와와 증인’ 교단의 소속인 경우, 심사 과정은 일종의 ‘루틴’이자 ‘정형화’된 틀이 형성돼왔다.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라 할 수 있는 기류가 흐른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자칫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교단에 대한 충실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혼돈이 된다는 점, 교단과

---

1) 신청 후 90일 이내, 하지만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기간 연장 가능, 2020년 6월부터 1년 이내 신청인의 경우에는 각각 240일 이내, 120일 이내 연장 가능

어긋난 상황(제명, 징계, 방황과 복귀 등)에 놓인 경우 본인이 성서에 근거한 병역거부의 신념을 강력히 주장하더라도 ‘전형화된 표준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체역 심사위는 납득할 만한 기준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이란 구분을 만들어놓고 따로 신청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신도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 더 불리한 심사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강화’의 의미는 (인용과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 심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질문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다반사다. 가령 생태주의자의 비건은 단순히 ‘본인의 섭식 생활 등과 관련한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의 일환일 뿐’으로 치부되거나,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은 ‘성적지향으로 인한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고 내쳐지거나,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의 경험은 ‘트라우마이지 폭력 거부의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재단된다. 이들의 신념을 비하하는 표현과 ‘여호와의 증인’과의 구별 짓기는 일종의 차별행위이자 괴롭힘으로서 문제적이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모든 인권은 추상적이고 선형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다. 구체적인 현실, 양심의 자유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권리의 정치가 시작된다. 이 글에서는 대체역심사위라는 구체적인 관계의 장소에서 대체역 신청자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아래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관용하고 있는 것인지(과연 관용의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지) 관용을 넘어 기본적 인권으로서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대체역 제도를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의 정치는 진전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망각과 지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반성해보려 한다.

## 2.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인가, 관용의 착각인가

관용은 지배적인 주류에 속하는 세력이 상대적 약자를 향해 베푸는 것이다. 관용의 한계를 정하는 칼자루는 관용하는 쪽이 쥐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를 국가권력이 용인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관용의 관점에선, ‘옥살이를 하지 않게 품어 주는 게 어디냐’는 시혜의 태도를 숨기지 않는다. 이는 대체역 제도를 둘러싼 공적 발화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으며, 대체역 심사위에서 그에 순응하는 신청인들은 ‘감옥에 가서 전과자가 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로 화답하곤 한다. 현 제도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입장이 그런 것이다. 현 제도에서는 대체역 제도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거스르고 평화주의 신념에 대한 존중이 아닌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양심은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용이 아닌,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논하려면, 수용자의 태도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포함한 강한 세력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겨냥해야 한다.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있느냐가 대체역 제도의 인권부합성을 가름하는 잣대이다.

양심의 자유를 정의하는 사회학적, 법률적, 인류학적 정의들은 넘치지만, 필자가 표현하자면, ‘세계를 향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태도’이자 ‘자신과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관점이자 활동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개체가 아닌 관계적 개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기에 양심의 자유는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교섭과 영향 주고받기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고유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타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타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 타자는 위협이기도 하다. 이에 인권은 인간의 중요한 이해관심을 각종 위협들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들이고 일국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관심사항이 되어왔다.

국제적 인권 규범과 각국의 헌법 등은 양심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이 간섭과 억압은 국가권력, 자본, 절대·유일의 포괄적인 진리임을 내세우는 종교, 또는 지배적인 다수자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적 제도로부터 올 수도 있다. 또한 양심의 자유는 개인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더 적극적인 의미도 가진다. 생각하는 자유,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활동, 창조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키워낼 수 있다. 나아가 동료 인간과 더불어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고유한 내면에 대한 인정과 그를 둘러싼 세계와의 교섭, 둘 다를 보장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의 토대가 되는 것은 각 사람의 존엄성이다. 존엄성은 취약성을 내포한다. 기존 질서나 제도로 인해 상처받을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취약성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국가책임이 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자유의 제도적 보장이다. 그런데 현 대체역 심사위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존중보다는 시혜로써 포섭한다는 관용의 태도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 ● 양심의 자유의 주체성에 대한 부인

단지 국방 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객체로 대하는가? 국방의 의무, 그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지위와 주요 자원들의 사회적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주체, 기존의 사회적 배치를 다르게 재구성하자는 주체에 대한 인정인가?

현 대체역 제도는 단지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협애화돼있다. 지향과 의미 같은 건 증발하고 알량한 형식만 남은 식이다. 그러하기 대체복무자를 단지 관용과 포섭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수용을 시혜적 차원에서 고려하기에 '국방의 의무'나 '평화'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중심으로 현역병을 기준으로 위계화한 틀에서 대한다. 관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가권력이고 대체복무 신청자는 국가권력이 용인할 만한 객체로 존재해야 한다. 집총거부를 교리로 하는 '확실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관용과 포섭일 뿐 대체복무자의 적극적인 주체성을 존중하려 하지 않게 작동한다.

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구' 중에 대체역 신청자는 별 의미 없는 '인구'이나 군복무자를 '정상적'인 '표준'으로 다루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관리돼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병역회피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 그게 심사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싶다. 대체복무의 형태와 내용은 '군복무자'를 기준으로 비교되고 저울질된다. 대체복무 자체가 군사 제도나 군사문화의 틀로는 담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 제도를 국방부와 병무청의 통제하에 둔 것 자체가 대체복무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체복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행위주체성을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적 시혜의 객체로 다뤄진다.

국민 또는 군인으로 호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에게, '세계시민주의'와 그에 따른 실천을 자기 양심에 대한 의무로 여기는 이에게, '군인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자'로 호명하는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현 제도가 '징벌적'이란 것('징벌적'이란 표현을 쓰는 것조차)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입장은 늘 '현역이 더 가혹한데'라는 표현으로 일관된다. 현역 복무자가 '기준'이

되는 설계 자체가 차별적이고, 그로 인한 지위의 불평등과 경제·사회적 기회의 악화를 야기하는 것이 제도적 괴롭힘이란 것을 인정하기는 커녕 인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대체역 위원회가 국방부 병무청 산하라는 것, 위원의 상당수가 국방부와 병무청과 관계된 전·현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근본적 문제인데, 최근에는 대체역 위원회 위원을 29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는 법 개정으로 그 비율이 33.3%에서 40%로 더 늘어났다.

대체역 위원회는 상당 기간, 위원장의 공석으로 인해 위원장 직무대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2021년 33차례 전원회의 중에 10여 차례를 비상임위원들 중 연장자가 직무대리로, 2022년 25차례 중에 9차례를 사무국장이 직무대리로 의장을 맡았다. 이는 신청인의 방어권과 제도개혁 논의를 가로막는 심각한 침해였다. 위원장 직무대리인 비상임위원이 참여한 논쟁을 이끌기는 역부족이었고 위원장 취임 이후로 핵심 쟁점들은 미뤄졌다. 2022년의 경우 사무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상임위원 자격으로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방부 공무원인) 사무국장이 상당 기간을 대리했다. 변화를 꺼려하고 병무청 하에서 심사제도를 운영하려는 의도가 지배적인 가운데 회의가 주재됐고, 문제제기와 토론의 심화는 노골적으로 저지됐다.

또 다른 사례는 대체역위원회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sup>2)</sup>이다. 대체역 제도현황분석과 발전안을 2022년 3월 발주한 연구용역은 그 설계안에 대해서부터 위원들의 비판적 문제제기가 많았다. 1년여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이 내놓은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체복무 당사자의 의견은 담기지 않고 대체역 제도 이전으로 퇴행하는 듯한 여론조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이 과연 필요한지가 의심됐다.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는 군복무회피자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할지를 중심으로 질문이 설계됐고, 국민 일반 여론조사와 함께 군복무자/여성 등으로 나눈 그룹 여론조사는 대체역 제도에 대한 호감도 조사 이상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에도 계획을 철회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다. 특히 대학생 대상 여론 조사는 직접적 ‘이해관계자’라면서 군 전역자와 입대예정자의 의견을 비교·분석한다고 했는데, 그 목적과 적절성 및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이 비판의견이었다. 연구용역에 대한 위원들의 참여와 시정요구는 거부됐고, 연구용역의 결과는 ‘현행 심사 체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고 ‘대체역 제도를 병무청이 담당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수렴됐다.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연구용역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체복무를 군으로부터 독립된 순수 민간 복무제도로 운영하는 개혁을 저지하려는 입장을 가진 쪽이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총거부를 교리로 하는 ‘여호와와 증인’에 대한 특별히 배려하는 제도로 여길 뿐 사회적 소수자인 여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사유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머물 것이다.

사례로 대체역 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용어의 발화는 긴장을 일으킨다. 대체역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실조사보고서에서는 여전히 ‘병역기피자’란 단어가 발견되며, 회의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용어 사용과 관련한 빈번한 제재가 있다. 왜냐면 ‘양심’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여 병역거부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sup>3)</sup>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고, 대체복무는 ‘대체역’으로서 병역의 일종이라는 입장 때문이다. 위원회는 대체역도 병역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이고, 대체역으로 편입신청하려는 사람은 군사훈련을 포함한 현역·보충역 등의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군 복무 거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다. 이는 대체복무를 병역 의무의 객체로

2) <https://prism.go.kr>

3) 2019년 1월 4일 국방부 기자회견

포섭하려는 의도이다. 대체복무를 ‘양심의 자유’로 문제삼을 때는 군사적 영역에 매인 국방의 의무로 제한되어서 이해될 필요가 없다.

심사 중에 오가는 문답 중에 핵심이라 할 것은 ‘대체역에 대한 이해와 복무의지’이다. 이때 대개의 신청인은 대체역이 ‘군과 관계없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답한다. ‘대체역위원회 자체가 병무청 산하 조직인 걸 아느냐’고 물으면, ‘복무를 법무부 산하에서 하는 것이니까 군과 관계없다’는 식으로 자체 해석한 답을 내놓는다. 하지만, 현 대체역은 ‘순수민간대체복무’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사실을 심사위원도 신청인들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병역거부를 이유로 더 이상 감옥에 가는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수준에서 봉합해 놓고 그럭저럭 끌여가는 상황인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모순으로 가득차 있기에, ‘대체복무를 원하지만 현재의 대체역제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신청인이 이미 등장했다.

#### ● 취약성에 대한 무시, 비틀거림을 용납하지 않는다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리 호이나키)란 말처럼, 취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양심의 자유의 길을 가는 것은 ‘비틀거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흠없는 일관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자신이 지금 결정하고 행하고자 하는 병역거부라는 일은 20대 초반의 사람에게 두렵고 혼란스런 일이 분명하다. 이 결정을 두고 본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갈등과 혼란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그런데 대체역심사위에서는 그런 혼란과 방향을 추궁한다. 네 양심이 일관되지 않은 증거가 아니냐고 말이다. 이에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양심을 위원회가 원하는 언어, 자기의 언어가 아닌, 위원회가 해석하기에 좋은 언어로 말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납작하고 평평한 언어가 요구된다. 굴곡있는 서사나 방향의 서사는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것’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이다.

인권에서 존엄한 존재의 의미는 개인이다. 이 개인은 원자적 개체, 무리의 하나, 날개와는 다르다. 관계속에서 상호의존하나 자기만의 내면을 가진 존재로서의 개인이다. 자기의 사상과 의사에 따른 스스로의 법에 복종하는 자율적 개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다. 무리를 따르고 표준화된 소위 정상성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울 수 있다. 이것은 병역거부를 결심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순간에 완성되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의 결심 자체는 단지 출발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되어 자신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양심에 따른, 내면에 따른 행위를 병역거부로 표출하겠다는 것이다. 병역거부로 이루려는 양심의 자유는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고 자기만이 자신을 성찰하고 판단하고 용서하거나 심판할 수 있다. 여기서 타인은 자아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이다. ‘자기의 양심에 대해 생각하고 돌아가라’는 취지에서의 질문이지 심판자/심문자로서의 질문이 아니다.

#### ● 월권

심판자/심문자로서의 질문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는 신청인의 관련 비행 내지 범죄 경력과 관련돼서이다. 주의 정도로 끝난 비행이나 처벌이 끝난 범죄에 대해 일부 심사위원들은 다시 수사관, 기소 검사가 되고 판결을 내리는 판관의 역할까지 하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위원들은 신청인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볼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신청인에 대해 호통을 치거나, 이미 관계당국의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 ‘가벼운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재수사나 재심을 하려는 듯이 구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내면의 것으로 그것이 발휘돼 타자에게 위해를 끼쳤으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만, 대체역 심사위는 그런 판단

의 권한을 가진 곳이 아니다.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1년 6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대체복무를 신청하러 온 사람에게 다시 범죄인을 심문하듯이 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한다.

#### ● 권리 대 권리의 구도 만들기

대체역 심사위에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연히 대체복무 신청자이다. 국가권력을 대신하여 조사를 하고 질문을 던지는 쪽은 권력관계에서 강자이고 기득권이다.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때 그것은 폭력이며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는 이 기울어진 권력관계에서 사회적 소수자이자 약자에게 보장돼야 할 권리이다. 그런데 ‘권리 대 권리’의 구도로 만들면, 힘센 쪽이 이긴다. ‘담당 조사관의 양심의 자유’, ‘대체역 위원회 위원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이런 식의 대당구조는 말도 안된다.

가령 대체역 위원회의 초창기부터 ‘게임 관련’ 질문과 신청인을 ‘병역기피자’라 지칭하는 표현에 대한 위원회 내부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밖에도 심사과정의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표현들이 계속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질문가이드북과 인권보호심사규정도 만들게 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시도 자체가 위원들의 권리 침해라는 반론이 계속됐다.

게임 관련해서는 대체역 위원회 초기(4차 전원회의)에 이미 문제제기가 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청인의 폭력 게임물 이용 전략이 심사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그동안 폭력적인 게임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에서 한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현실 세계와 연관성이 없는 게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양심형성 과정에서 게임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양심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폭력적인 게임물 이용만으로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대체역 위원회가 신청인의 양심 형성과정에서 욕의 티를 찾아내듯 접근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게임관련 질문을 자제하자는 취지였다.

또 해당 종교의 교리에 폭력적 게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에 폭력적 게임물 이용 여부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폭력적 게임물과 관련해서는 능동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련해 사실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게임을 했다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의심하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주의적 신념이라면 폭력적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강했다. 하지만 당국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양심의 당사자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윤리로서 지켜야 할 양심의 의무를 국가 공권력 앞에서 지키라고 요구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3년여가 돼가는 시점에도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의 유해판정등급표가 조사보고서에 참조 자료로 올라오고 여전히 게임 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표현이 못마땅해서 지속적으로 ‘병역기피’로 서류에 표현하는 일도 있다. 이런 행위를 끈질기게 계속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적 편견을 공무로 집행한 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 폭력에 대한 양상한 이해

대체복무 신청자의 반-폭력의 신념은 집총거부나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폭력주의로 납작해진

다. 상징적으로 ‘총’을 들지 않겠다는 표현에서 ‘총’은 직접적인 무기를 가리킬 뿐 아니라 존재가능한 모든 폭력의 은유이기도 하다. 전쟁과 테러처럼 가시적인 폭력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착취, 주변화, 무력화, 비정상적으로 낙인찍고 배제하기, 증오 폭력과 혐오 등 체계적 폭력 내지 구조적 폭력에 대한 반대도 포함된다. 가시적 폭력에 반대하기는 쉽지만 구조적 폭력에 대해선 간단치 않은 것이 자신도 그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런 체계나 구조에 의도적으로 협조하지는 않겠다는 반-폭력의 신념을 표출하는 신청인들이 있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에 대한 반대와 달리 이런 반-폭력의 신념은 의심받기 십상이다. 현존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구조적 불의에 맹목이 될 우려가 있는 비폭력주의만이 인정되며, 현존하는 권력에 대한 견제 또는 적극적 거부를 행하는 불복종으로서의 반-폭력-저항 운동으로서의 평화주의 신념은 이해되기 힘들다. .

총을 들지 않겠다는 교리에 따르거나 일체의 폭력적 게임을 하지 않는 등 비폭력적인 품행의 일관성을 보이거나 하지 않으며, 보편화된 경쟁 사회 속에서의 위계적 서열화 및 구조적 배제의 문제까지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경쟁적인 위계화와 서열화에 자기를 내던지고 자신을 ‘인적 자본’으로 규정하는 체계에 맞서겠다는 ‘다르게 살기’의 실천자는 현 대체역 제도에서 평화주의적 신념으로 용인될지 의문이다.

대체복무 신청인의 신념에 대한 질문보다 ‘품행방정’과 관련된 질문에 몰두하는 관행을 보면 대체역 심사위가 고려하는 폭력의 개념과 범위는 협소하고 편협하기 그지 없다. 대체복무 신청자가 자신의 신념을 진술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폭력-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대한 인지적 부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심사단계에서의 해석 차원에서도 해당 신청인의 신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정의가 이어지게 된다. 이는 신청인의 진술을 하찮게 여기거나 불신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인지적 부정의와 인정 차원의 부정의는 질문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드러나고, 그 결과가 기각 의견이다(부록 <대표적인 기각 사유들> 참조).

#### ●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이해의 문제

대체역 제도는 ‘차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동질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 제도의 전제 조건인 ‘차이’에 대한 존중보다는 ‘국방의 의무’로의 동질성의 강화가 더 주요한 것이다. 그런데 ‘다양성’, ‘차이’에 대한 존중에 대한 문제제기는 엉뚱한 데서 터지곤 한다.

대체역심사위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는 단어 중의 하나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다. 심사기준에 대한 토론과 경합이 고조되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호출되는 단어가 이것인데, 이 단어를 주로 쓰는 쪽은 토론의 ‘중단’과 ‘불합’을 요구하곤 한다.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충고’로 토론이 강제중지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다양성’이란 용어가 대체역 제도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들곤 한다. 현 제도의 인권부합성에 대해서 의견은 경합할 수밖에 없고 치열한 토론을 요구한다. 토론을 방해 내지 금지하기 위하여 ‘다양성’을 운운하는 것, 그냥 병렬적으로 늘어놓고, 그 모든 의견을 전부 다 인정하라는 식의 절대적인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차이가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서 만들어지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공통분모가 없는 복수의 의견들만 나열될 뿐이다. 심사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질문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대체역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불거질 때마다 ‘만사형통’ 내지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등장하는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다양성(diversity)은 절충의 키워드가 아니다. 다양성은 라틴어 diversus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대립과 모순, 부조화, 불일치, 이질성을 의미한다. 즉 다양성은 갈등과 분쟁, 경합의 가능성 또한 내포하는 것이다. 경합하는 토론은 이미 수립된 제도와 절차가 인권에 대한 억압적 지배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른 말로 탈지배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토론을 중단 내지 금지하기 위해 다양성이 호출되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둘째, 집단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이다. 대체역 제도 및 대체역심사위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소수 종교에 속한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으로 한정하는 듯하다. 대체역 신청인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종교 집단의 구성원에 한정된 의미로 다양성을 다루게 되면, 지배적인 집단과 문화가 배척하는 성적 지향, 사회적 계층, 장애, 신념 등으로 인한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포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기독교 신자의 병역거부를 그 종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동물권 운동을 하며 비건을 실천하는 신청인의 문제제기를 ‘섭식 생활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로, 성적 지향과 성차별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병역거부와는 상관없는 성애의 문제로 대하는 등의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나타났다. 특히, 국가의 폭력성과 자본의 도구화를 비판하는 신념을 가진 신청인은 기각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력을 경험해야 했다. 이걸 심사 과정에 참여한 필자를 비롯한 위원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이기도 했다. 제주 4·3등 국가폭력에 대한 사실 부정,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에 해당할 만한 공격적 언사들이 있었기에 이는 큰 상흔으로 남아있다.<sup>4)</sup>

셋째, 정체성에 대한 오인과 축소이다. 양심의 주체가 되는 개인들의 정체성은 고유하고 다양한다. 그런데 특정하게 축소된 존재 양태 안에 가두는 것은 사실상 존재에 대한 불인정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표준과 그들의 정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주장하더라도 의심받는다. 가령 비신도와의 이성교제,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이성교제나 성적 활동, 음란물 시청, 종교적 방향기를 거치거나 했으면 신도임을 의심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존재 양태를 획일화하고 그 교단 내에 있을 수 있는 위계구조와 억압 등과 부정의에 의문을 품고 내부에서 다룰 수 있는 개별 구성원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나가며\_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인권의 정치, 시민들의 연대

사회는 다양한 비주류와 소수성으로 구성된다. 한 사람은 어떤 점에선 주류에 포함되고 또 어떤 점에선 소수자에 속하기도 하는 다양한 정체성의 존재다. 그 자체로 순수한 형태의 동일성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동일성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이어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획득되거나 형성된다.

대체복무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흔히 사회적 소수자 내지 약자로 분류된다.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간주될 때, 더 섬세하고 세심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와는 별 상관없는 부차적인 문제로 사소화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다수와 소수, 중대한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의 구분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 그 관계는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인권 문제는 특권 내지 기득권과 관련해 구성되며, 누군가의 소수성은 다른 누군가의 다수성과 관련해 구성된다.

---

4) ‘신청인은 국가폭력의 상처로 제주 4·3사건, 용산참사, 베트남 및 이라크 파병, 세월호 참사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느냐’, ‘그 당시 제주도의 사회주의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폭력의 가해자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의 질문 사례가 있다.



지배적인 주류가 강조/강요하는 분류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질서와 제도의 배치를 정당화하고 공고화 해왔다. 다수자의 몸과 소수자의 몸, 군복무를 하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 생산하는 몸과 돌보는 몸의 위계 등이 사회정치적 관계와 제도의 배치를 지배해왔다. 이 맥락 속에서 그런 질서를 정당화·공고화하는 세계관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서 양심의 자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다. 이런 위계적 구조로부터의 탈출을 감행하고 위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려는 존재들, 정상화·평준화된 삶을 위한 경쟁에서 스스로 낙오되려는 이들은 언제나 있었다. 소위 ‘보편적’ 인권의 개념 아래 포함되지 못한 존재들이 그 위선을 폭로하면서, 인권 보편성의 개념 자체를 허물고 다시 만들자는 행위의 주체되기를 시도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술한 그런 존재들의 일부를 구성한다. 소수자로서 인정의 요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 제기 속에서 양심의 자유의 권리는 확대되고 보편지향적 인권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소수자 관용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사유하는 것은 당국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책무이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문제를 특정 소수자의 특별한 문제로 취급하고, 연결성 속에서 사유하지 못할 때 인권의 한계가 드러난다. 군복무를 꼭지점으로 한 사회적 지위와 배치는 바뀌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현역 복무자의 인권과 대당 관계가 아니다. 군 인권의 문제는 여성·장애인 등의 인권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연결된 문제로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렇게 사유하지 않을 때 서로를 구성하는 상대방은 권리박탈감을 일으키는 적대적 존재가 되고, 권리의 정치는 권리 파이를 놓고 다투는 권리 게임으로 타락한다. 국방의 의무를 비장애성년남성의 현역복무를 중심으로 위계화한 개념과 그를 통해 맺는 개별구성원의 사회적 관계, 국가와 맺는 관계가 변화되고 재구성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당면한 문제를 단지 ‘소수자’의 문제로 주변화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연결된 인권 사안으로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개별 대체역 신청인의 주관적 권리 요청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을 둘러싸고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맺는 관계 자체의 재구성 문제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 부록: 대표적인 기각 사유들<sup>5)</sup>

신청인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하여 반대하고 있다.

신청인은 군대와 교정시설 모두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폭력기구임을 인정하였는데, 국가 폭력기구의 일원이 되지 않기 위해 군대는 거부하면서 동일한 국가 폭력 기구인 교정시설에서 하는 대체복무를 수용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5) 제1차 대체역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와 2차 보고서 초안. 대체역 편입의 인용과 기각이란 결과에 상관 없이 논쟁이 된 사례에 대하여 기각으로 표현된 의견들 중 일부이다. 보고서는 논쟁 사안에 대하여 기각 인용과 인용 의견을 3 대 3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결정서에 반영하고 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비밀주의와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내부 투쟁의 결과로 가능했던 것이다.

신청인은 대체복무 중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표현할 수 없을 경우 대체복무를 그만둘 수 있거나 대체역 편입신청이 기각될 경우 망명 등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등 대체역 복무 이행의지가 미흡하다.

신청인은 외부적으로 양심을 실천하지 않아 구체적 양심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신청인의 양심 형성에 영향을 준 서적들은 천문학 교양서적으로 신청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직에 소속되거나 명령을 받는 것을 싫어하여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으로 보기 힘들다.

신청인의 과거 범죄 행위에 폭력성이 내포되어 있고, 형사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지 못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군 복무 거부 신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신청인이 어렸을 때부터 종교활동을 하였다고 하나 종교활동을 중단한 기간이 상당한 만큼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다고 보이지 않고, 군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종교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소속으로 다양한 집회활동한 내역이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실천이라기 보다는 국가 체제나 제도를 불법적이라거나 폭력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여러 집회·시위에 참석하여 집회·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에 맞서는 과정에서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점...

신청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한 점은 인정되나 교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이성 교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교리 위반 행위로 제명되었는데, 그 행위는 중대한 폭력행위라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은 대체역 편입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신청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과거 책망 기간 중에도 동일한 교리 위반 행위를 하여 신청인의 종교적 신념의 진실성과 확고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살인과 폭력을 금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모순되는 행동을 하였다(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시행한 임신중단 수술을 가리킴).

신청인은 평화주의 신념과 군대에 대한 거부감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군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평화주의 신념과 모순되는 과거 행동이 있었고, 지금도 군대 관련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신청인의 평화주의 및 세계시민주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신청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였지만 사상과 활동에 일관성이 없고, 대체복무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 대체역 수행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평화주의적 신념은 다른 기독교인들이 갖는 폭력과 전쟁을 혐오하고 평화를 바라는 보편적 본성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와 달리 특별하게 군복무 거부 신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청인이 신봉하는 종교 교리에 군복무 거부 교리가 없고, 신청인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신청인은 종교활동을 중단한 기간 동안 범죄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는지 이러한 행동이 신청인의 종교가 금지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다.

신청인은 비록 종교활동을 중단한 기간이라고 하나 비신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수차례 현역 복무를 지원하였고, 범죄행위가 발간된 직후 종교활동을 재개하며 제3자의 조언을 받아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체역 편입심사가 종교활동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신청인은 대체역 편입신청 이후 군 복무 거부 신념이 확고해졌다고 진술함으로써, 군복무 거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은 과거의 단체 기합, 체벌 등의 문제를 군사 문화로 확대 해석하여 군사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모든 군대는 사라져야 한다는 군 복무 거부 신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를 지지하는 것은 그 신념에 모순되는 행동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군대에 대한 추상적인 폐습이나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등 군대 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든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에 기반하여 군 복무 거부 신념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이 심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체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고, 신청인은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 변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신청인의 관련자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병역거부가 성적 지향으로 인한 병역거부라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한 내용이 있는데, 성적 지향으로 인한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

군 복무중인 채식주의자와 동물애호가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군 복무 거부 양심은 절실하다기보다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

식물과 동물관, 채식주의 등의 개인적인 생활 및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정도는 아니고 이를 병역의무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